

# 지방선거 참패... 후폭풍에 휩싸인 야권

### 한국, 당명교체·중앙당 해체 추진 미래, 비대위 체제로... 의원 워크숍 평화, 지도부 사퇴 촉구 내부 분란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전무후무한 사상 최대의 압승을 이끌어 내면서 참패한 야권이 후폭풍에 휩싸이며 격랑에 휘말리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권은 선거참패에 따른 책임론으로 지도부가 사퇴하며 공백상태인가 하면 당 쇄신 요구가 빗발치며 내홍을 겪고 있다.

야권의 선거참패에 따른 지방선거 후폭풍으로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과정에서 야권을 중심으로 정계개편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어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6·13선거 참패에 따른 직격탄을 맞고 있다. 홍준표 대표가 책임을 지고 사퇴한데 이어 다섯만에 내놓은 설익

은 수습책으로 내홍만 격화되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부로 한국당은 중앙당 해체를 선언하고, 이 순간부터 곧바로 해체작업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직접 중앙당 청산위원장을 맡아 해체작업을 진두지휘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같은 혁신작업은 구태청산 태스크포스(TF)와 비상대책위원회 ‘투트랙’으로 진행하되, 비대위원장은 외부인사를 초빙해 맡기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가 발표한 쇄신안은 즉각적인 반발을 불렀다. 1차적으로 김 원내대표가 지방선거 패배에 책임을 피할 수 없는 당사자인 데다, ‘중앙당 해

체’ 같은 자극적인 언사를 동원해 소나기 피하기식 대책만 내놓았다는 비판이다.

당내에서 백가쟁명식의 쇄신방법이 난무하고 있는데다 김 권한대행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다. 쇄신을 언급하는 그 누구도 자기희생을 동반하지 않은 ‘나만 뺄 쇄신’을 외치는 형국이어서 한국당의 추락은 한동안 반전을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바른미래당은 지방선거에서 안철수 전 의원의 서울시장 3위 낙선과 유승민 전 대표의 사퇴 등 ‘리더십 부재’ 상황에서 당의 노선과 정체성 등을 두고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선거 직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 바른미래당은 ‘8월 전당대회’ 실시로 수습의 가닥을 잡았다.

비대위원장에 추대된 김동철 원내대표는 현역의원이 중심이 된 비대위원 4인을 선임한데 이어 19일부터 1박2일로 경기 양평 용문산에서 워크숍을 개최했다. 또 이르면 주내 후임 원내대표를 선출할 방침이다.

뜨거운 감자는 정체성 논란이다. 바른미래당은 합리적 진보를 주장하는 국민의당 출신과 개혁적 보수를 외치는 바른

정당 출신들이 각자 자신들의 정체성을 주장하며 화학적 결합을 이뤄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들어왔다.

정체성 혼재는 선거패배 원인이 됐지만, 향후 원내대표 경선 등에서도 노선다툼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내홍 조짐을 보이고 있는 민주평화당은 고문단까지 회동하며 당내 분란 진화에 나섰다.

권노갑·정대철·이훈평 등 평화당 고문들은 이날 오전을 겸해 여의도 모처에서 당의 노선과 정체성 등을 두고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번 회동은 21명의 평화당 지역위원장이 지난 18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조배숙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의 동반사퇴와 함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촉구한 것에 따른 것이다.

현재 평화당 내부에서는 조기 전당대회를 추진하지는 쪽과 비대위 구성을 촉구하는 쪽이 맞서고 있다.

평화당은 20일 의원총회를 열어 8월로 예정됐던 전당대회를 7월로 앞당겨 치르는 방안은 물론 비대위체제 전환의 필요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강병운 기자

## 시·도의회 의장단 선출 물밑경쟁 치열 민주당 독점 속 지방의회 의정활동 ‘바로미터’ ‘초선’ 광주 86%·전남 74%...기대·우려 교차

6·13 지방선거로 선출된 새 의원들 맞는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의장단 선출 등 의회 개회를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초선의원 비율이 광주시의회는 86%, 전남도의회는 74%에 달하는 상황에서 의장단 선출은 물론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9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새로 당선된 8대 시의원 23명(재선 3명·초선 20명)이 모두 참석하는 첫 회동을 오는 28일 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가진다.

이 자리에서는 의회운영 방안, 8대 의회 전반기 의장단 선출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차기 의장선거에는 재선인 김동찬·김용집·반재신 의원이 뛰어들었으며, 일부 초선의원 1~2명도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집 시의원은 “개원 전 3차례 정도 정책간담회를 열어 8대 의회 운영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며 “의장단 선거도 철저히 민주적으로 치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남도의회도 오는 22일 의원 오리엔테이션을 열어 원구성·상임위 배정 등에 대해 논의한다.

새 도의회는 민주당 54명·민주평화당 2명·정의당 2명 등 58명이며, 이중 초선이 41명(74%), 재선 12명(20.68%), 3선 5명(8.62%) 등이다.

의장 선거에는 3선에 성공한 이장석(영광2) 현 부의장·이용재(광양

1) 의원, 재선 의원이 되는 김기태(순천1) 의원 등이 경쟁하고 있다.

시·도의회 의장단 선출을 놓고는 의회 안팎에서 벌써 격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광주·전남 지방의회 선거에서 압승한 상황에서 의장단 선출을 놓고 잡음이 나올 경우 당에 대한 비난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 중앙당도 이를 의식해 지난 15일 사무총장 명의로 시·도당에 공문을 보내 “민주적·자율적으로 의장단을 선출하되, 향후·금품 선거는 해당 행위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전남도의회 의장 선거에 출마할 후보 3명은 이에 호응해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후보들은 “도민 대의기관 수장인 의장선거에 임해 상대후보에 대한 비난과 흑색선전을 자제하고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를 엄단하겠다”며 선거결과에 승복하고 도정발전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초선의원이 시·도의원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 점에 대해서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광주시의회만 해도 구의원 출신 당선인이 전체 당선인 23명 중 9명이나 된다. 구의원으로서 시민과 부대끼며 경험한 의정활동이 시의회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부터, 자리다툼이나 이권개입 등 구태를 시의회에서 보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정근산·조기철 기자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아 온 전남 일부 기초의회의 순금배지가 올해부터 사라질 전망이다.

19일 전남 각 기초의회 예산내역을 확인한 결과 지난 2014년 제7대 지방의회 개원을 앞두고 광양시와 함평·구례·강진·신안·진도군 등이 지방의원 배지를 순금으로 제작해 지급했다.

1개당 제작비용은 함평 54만원, 구례 38만원, 진도 34만원, 강진 31만원, 광양 29만원이었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3만5,000원짜리 도금배지를 착용하는 상황에서 기초

## 기초의원 ‘금배지’ 올해부터 사라진다 열악한 예산·따가운 여론 의식 ‘도금’ 제작

의원들이 착용한 수십만원짜리 순금배지는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도 각 시·도에 공문을 보내 일반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정도의 가격으로 기초의원 배지를 제작하라는 지침을 통보했다.

결국 7월 개원을 앞둔 기초의회는 비판 여론과 정부지침을 의식, 올해부터는 일

제히 도금배지 제작에 들어갔다.

올해 1개당 60만원의 배지제작 예산을 편성한 함평군의회는 “예산은 예년 편성 금액이 그대로 올라와 있을 뿐”이라며 “이미 도금으로 제작을 의뢰해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신안군의회도 “지나해 행안부 권고에 따라 올해는 도금으로 제작할 예정”이라

고 전했다.

강진군의회는 “인근 자치단체 의회의 제작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27일 당선자 워크숍에서 의원들에게 도금배지 의견을 청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광주·전남 기초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에서 이런 형세는 지역민이 원하는 바와 크게 동떨어진 모습”이라며 “지방의원들이 선거 때의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촉구했다.

/정근산 기자



바른미래당 워크숍.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9일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 야영장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이종훈 정치평론가가 배석한 가운데 자유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총선대비’ 광주·전남 지역위원장 선정 촉각 국회의원 3명 불과...치열한 자리다툼 전망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지역위원장 선정이 총선 2년을 앞두고 지역 정가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2년 임기의 지역 위원장은 총선 공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전남은 민주당 지지도가 압도적인데다 현역 국회의원이 3명(이개호·서삼석·송갑석)에 불과해 지역위원장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지역정치권 안팎에서는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당내직 지역위원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전남 18개 지역구 중 현역인 이개호 의원 등 3명은 무난히 해당 지역구 지역위원장에 오를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나머지 15개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단수로 선정하거나 경선을 치러 결정할 예정이다.

지역구가 8곳인 광주는 기존 지역위원장들이 지방선거에 나서면서 사퇴해 복구, 광산 갑·을 등 3곳을 제외하면 모두 대행체제다.

10개 지역구인 전남 지역위원장 선정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선거결과가 다른 지역에 비해 좋지 않은 지역위원장은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

중앙당 당권경쟁과 맞물려 예상 밖 인사들도 지역위원장에 오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유력자들이 자신을 지지하는 인물을 지역위원장에 추천하거나

물밑지원을 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청와대 비서관들의 총선출마 여부도 지역위원장 선정과 연계돼 기존 구도를 흔들 수도 있다.

지역위원장과 함께 광주시장·전남도당 위원장 선임도 지역정가의 관심사다. 광주시장위원장은 이형석 위원장 후임으로 지역 유일 현역 국회의원이 된 송갑석 의원이 맡을 가능성이 크다.

전남도당위원장은 위원장을 맡은 이개호 의원의 농식품부장관 발탁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이 장관으로 가면 도당위원장에는 영암·무안·신안 재선거에 당선된 서삼석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근산·조기철 기자

행복 위에 지은 집 GOLD CLASS

프리미엄 상가의 정점을 찍다!

남구주월 골드클래스 단지내 상가

선착순 수의계약

사전 예약상담

서문대로변 대형 스트리트 상가 | 5만여 명의 풍부한 배후수요 | 합리적인 분양가 | 중도금 무이자 | 유럽형 테라스상가 | 상가전용 공용창고 제공

시행 골드더움(주) 시공 보광종합건설(주)

062) 227-2278